

신안에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들어선다

150억 들여 2020년까지...인증 활성화·위생관리 강화 해수부, '천일염 산업발전방안' 마련

천일염의 저장·가공·유통 기능을 연계하는 천일염 종합유통센터가 오는 2020년 신안군에 들어선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일염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수부가 '소금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것으로, 천일염 산업의 현안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에 ▲고부가가치 천일염의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 ▲천일염 생산자 체질 강화 및 수급관리 역량 강화 ▲천일염 유통구조 선진화 ▲수출경쟁력 강화와 6차 산업화 추진 등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최근 저염식 섭취 등에 소비경향 변화와 천일염 업계의 영세성, 산지가격 지속 하락, 산업 인프라 부족 등에 따른 대안 마련이 주요 과제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천일염 인증제 활성화, 국제식품규격(CODEX) 염도의 97% 이상을 충족하는 등 해외수요를 충족시키

는 고부가가치 천일염 제품 개발 등이다.

천일염 생산 자동화 및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생산현장 수요에 대응해 체질 자동화 기계 등을 보급 지원해 생산시설 자동화를 이루고, 염전 바닥 개선과 취·배수용 배관 설치 지원 및 생산환경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생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신안군에 천일염 저장·가공·유통 기능을 연계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유통구조도 선진화한다.

이 유통센터를 통해 새로운 소비처를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모델도 발굴하고 홍보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김치와 절임류에 대한 소금 원산

지 표시 의무화와 천일염 이력제를 시행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생산자단체 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수급 관리를 지원하고, 생산자 역량과 수출경쟁력 강화 등 천일염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천일염 체험장과 소금박물관, 소금동굴 힐링센터 등을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별 갯벌 문화와 생태 체험관광을 결합한 염전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6차 산업화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천일염산업 발전 방안을 충실히 추진해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천일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농아인들 시청 앞 농성 왜?

농아인협 "장애인 현장 특수성 못살핀 특정감사 거부"

"장애인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특정감사결과로 인해 광주에 거주하는 1만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갈등과 분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농아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50여 명이 간간히 북을 울리며, 목소리 없이 손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최근 광주시농아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를 대상으로 한 광주시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미다.

광주시농아인협회 비대위도 유인물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공직자들을 모욕구식 감사로 상처를 주었으며, 그로 인해 장애인복지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결국 모든 농아인들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 관계자는 "특정 용, 출장비·인건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절 등으로 11건이 문제점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는 게다가 감사를 의뢰한 시

장애인복지과 직원 2명, 서구청 직원 2명 등 4명을 지도감독 부실로 경징계할 것을 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 장애인복지과·자치구 직원조차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뒤 현장 지도에 나섰고, 전국농아인협회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지적할만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시 감사위의 특정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미다.

광주시농아인협회 비대위도 유인물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공직자들을 모욕구식 감사로 상처를 주었으며, 그로 인해 장애인복지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결국 모든 농아인들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 관계자는 "특정 용, 출장비·인건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절 등으로 11건이 문제점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는 게다가 감사를 의뢰한 시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해 적극 참여"

한국노총 광주본부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는 현대자동차 완성차 광주 합작공장 설립과 관련,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투자자 확보에 앞장서는 등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과 한국노총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11일 광주시의회에서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간의 투자협약은 단순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꾸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는 데 동참하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본부는 "공장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하는데 지역 노동계와 함께 실시할 반 동참하겠다. 나아가 지역의 기업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투자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투자자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사상생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공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나 노동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각계각층이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일곡지구 불법쓰레기 매립 LH가 책임져야"

조석호 광주시의원 주장

"청소년 문화의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 발견한 광주 일곡지구 근린공원 불법쓰레기 매립지와 관련, "당시 매립주체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옛 한국토지개발공사·현 LH)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민주·북구4) 의원은 11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89년 일곡택지지구 조성 발주처는 광주시, 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당시 토개공)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시 택지지구 내 쓰레기매

립지 처리를 위해 광주시와 토개공이 관계 기관 회의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토개공은 전담대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비닐이나 캔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일곡 제3근린공원 등에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량은 약 6만 정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 매립지 등으로 사용했던 부지의 폐기물을 파낸 경우 공사 시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외부로 반출하거나, 부지 내 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 데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1995년 일곡택지지구에 대

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광주시장이 시행자인 토개공에 대해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다"며 "폐기를 불법매립 행위자인 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처리비용을 부담해 쓰레기를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말 일곡지구 근린공원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를 추진하던 중 지하 4-11m 지점에서 대규모 쓰레기 매립층이 발견되자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광주시는 쓰레기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새마을장학금 조례안 즉각 폐지하라"

광주시민단체, 시의회 처리 촉구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특히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의 광주 시의회 처리를 촉구했다.

새마을장학금 폐지 시의회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장학금 폐지 문제가 일부 시의원들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처리 여부가 기로에 놓여 있다"며 "40년 묵은 유산적폐, 새마을장학금을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생부터 관제 동원조직이었던 새마을회는 해마다 막대한 사업비와 조직 운영비를 지원받고, 자녀들한테 장학금까지 지급해 왔다"며 "지난해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새마을장학금 즉시 폐지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공정사회를 바라는 시민들 편에 설 것인지, 특정단체 이해관계에 따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장영준·김광관·신수정·최영환·정무창 의원은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발의했으며,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는 13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은 41년 전인 1978년부터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광주역 도시재생뉴딜사업' 확정

광주시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승인을 위한 '실현 가능성 타당성 평가요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11개 사업 중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해 세부사업을 5개로 조정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타당성 평가요청서에는 지난해 8월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쇠퇴한 광주역을 타개할 전략, 실현

가능한 사업, 단위사업별 사전 절차, 시설공사·운영계획 및 추진일정 등 실행계획이 담겼다. 5개 사업은 ▲창의산업 플랫폼 가치 '스테이션G' ▲문화마당 조성 및 교통보행환경 개선 ▲푸른길 선형공원연계 '푸른이음공원·센터' ▲도심형 제조산업활성화를 위한 '어울림팩토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광주역허브센터'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 형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땅+건물+태양광 = 2년6개월(현금투자회수가능)
선로걱정없는 한국형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읍 잔여분 3기

2019년 10월 준공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